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의 방향과 과제」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서

일시 : 2009. 3. 17(화) 16:00~18:00

장소 : 국회의정관 105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간담회 개요

토론요지

1

1. 경제 상황 진단 및 경제전망 3
2. 추경 규모와 재정건전성 4
3. 자원배분 8
4. 질의·답변 11

토론전문

13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의 방향과 과제 15

- ↳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간담회 개요

1. 주 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의 방향과 과제

2. 일 시 : 2009년 3월 17일(화) 16:00~18:00

3. 장 소 : 국회의정관 105호

4. 사 회 : 김호성 (국회에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5. 토론자

-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요 지

1. 경제 상황 진단 및 경제전망 _3
2. 추경 규모와 재정건전성 _4
3. 자원배분 _8
4. 질의·답변 _11

가.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현 경제위기는 3가지 특징이 있음

- 내·외수 복합불안 심화
 - 정부와 민간은 -2% 내외를 전망하고 있음(상반기 - 6%)
 -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내수침체와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의 복합불안에 기인
- 미래전망의 불투명(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 경제회복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 세계경제회복의 5대 복병

- 미국 : 금융위기가 소비자금융(카드사)까지 확산우려 → 제2금융위기 우려
부동산 경기침체의 상반기 지속
- 일본 : 엔고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로 이어질 가능성
동북아 역내 교역의 붕괴 가능성
- 중국 : 수출 감소에 따른 6%내외 성장(당초 8%)으로 성장의 경착륙 가능성
- 동구권 : 국가부도 우려
서구의 지원이 없을 경우 동구권 경제 붕괴의 도미노 가능성
- 중동 : 건설경기 붕괴
서구의 투자자금 감소 → 중동 건설공사 감소 → 우리나라 건설회사 해외수주 감소

○ 고용침체 문제

- 현재 정부 재정지출, 일자리 유지 노력 등으로 현재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고용시장 붕괴는 나타나지는 않음
- 그러나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급격한 붕괴 가능성 존재

- 마이너스 성장 지속 → 기업실적 악화 → 기업구조조정 현실화 → 고용시장 붕괴
⇒ 고용시장 붕괴 방지 대책 중요

2

추경 규모와 재정건전성

가. 이만우(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나 선제적으로 대규모의 추경 필요
 - GDP 대비 3~5% 규모 필요
 - 세수결함 보전분 12~13조원 반영시 실제 지출 규모는 30조원의 절반에 불과
 - 경제상황에 따라 하반기 추경도 편성 검토 필요
- 다만,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개혁 방안 마련 필요
 - 기금 통·폐합, 공공기관 선진화 등

나. 전주성(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작년 예산 편성에 잘못이 있었음
 - 정확하고 신중한 경제전망을 토대로 하고, 재정적자의 시차를 고려해 본예산에서부터 적절한 재정확대가 필요했었음
 - 우리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미약하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자의적 개입 필요
 -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기에 시행할 필요
- 추경은 실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편성되어야 함
 -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으므로 GDP 대비 5% 이내의 일시적인 재정적자는 감내 가능
 - 그러나 지속적·구조적 적자는 신경 쓸 필요
 -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적시성(Timely), 일시성(Temporary), 목표성(Targeting)을

확보해야함

-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전달체계가 미흡하여 재정지출승수가 작음
 - － 정부지출이 18조원 증가한다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2% 증가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음
- 본 예산 및 추경집행과 동시에 차제에 재정전달체계의 개선에 힘쓸 필요
 - 재정개혁, 규제철폐의 기회
 - 체계적인 평가기구를 설립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후보고서 발간 필요
- 이론적으로 추경 규모가 충분히 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시에 큰 규모의 추경을 하는 것은 견제할 필요
 - 재정집행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시에 추경 규모가 커지면 도덕적 해이 유발
 - 백화점식으로 사업예산들이 편성되기 쉬우며 이는 실효성 저하 원인,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의 추경편성에 문제 대비할 필요
 - 경제상황에 따라 2차 추경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분명한 목표지향점을 갖는 추경이 필요함

다. 황성현(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추경 29.5조원 규모, 15조원 국채발행 보도
 - 세수결함분 제외할 경우 실제 지출 증가 18조원 수준
- 추경 불가피
 - 하반기에는 상반기 보다 악화 가능성 → 빨리 편성할 필요
- 재정건전성(지속가능성)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
 - － 감세정책 포기
 - － 재정지출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재정개혁 추진: 예산 평가관리를 전담하는 부처 신설 검토
 - － 국채발행의 소화가능성 검토

□ 추경 규모

-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4~5% 수준이 감내 가능하므로 추가지출 규모 10-20조원 수준으로 편성
- 하반기에도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경 편성의 여지를 남길 필요
 -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삭감 검토

□ 정부의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

- 감세정책 : 정부의 조세부담률 20%대 목표는 잘못된 것이고 다소 이념적
 -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감세정책은 포기해야 함
 - 확정된 감세안의 감세시기를 늦추는 방안 검토
-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
 - 정부의 7.4.7 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경제 전망 등 신뢰 상실
 - 과거 국가채무 등에 대한 과도한 비판에 대한 반성과 정부통계의 신뢰성 제고

라. 이영(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재정건전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추경으로 인한 관리대상수지 악화
- 구조조정기금 등 감추어진 재정적자 문제

□ 추경 규모 : 순지출 15조 바람직

- 경제악화가 주로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데, 대외충격에 대응한 내수 진작을 위한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바람직한지 의문
- 재정조기집행이 효과가 있으므로 초반(60%), 후반(40%) 재원배분 검토

□ 대외경제가 악화되고 있으나 경제회복의 가능성 존재

- 3월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 전망 등

□ 감세 등 작은 정부의 지향은 바람직함

- 다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면, 조세부담률 20% 이하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23%정도가 타당

-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세제 합리화로 이해
- 조세의 형평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세원을 양성화할 필요

마. 김호성(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 추경으로 발생하는 국가채무는 우발적 채무로서 별도 관리 필요
- 기존의 국가채무는 「국가채무관리계획」 활용
- 이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된 국가채무는 세대간 배분, 정부간 배분을 검토하여 별도 상환계획(해소방안) 마련 필요

바. 이만우(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향후 공적자금 정부부채 전환, 양극화, 남북관계, 복지 문제 등으로 적자 재정 우려

□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건전재정 회복의 자신감 확산 필요

- 현재 기금을 3년마다 평가하고 있으나 기간 축소 필요
- 중·장기 재정개혁 과제 검토 필요
 - 공기업 선진화, 민영화 계획 수립
 - 평가체계 개혁 등

사. 전주성(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의 일시성(Temporary)을 확보할 필요

- 현 상황에서 일시적 적자는 불가피 하지만 지속적 적자는 경계할 필요
 - 외환위기 이후 일반회계 적자 국채를 발행한 이후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재정전달체계가 부실하고 시차가 큰 상황에서는 목표 지향적(Targeted)인 지출 방식이 효과적
 - 추경도 적절한 규모로 용도가 분명할 때 효과적

- 보증채를 통한 공적자금 조성하고 사후에 국채 전환하는 방식도 목표와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단순 국채발행 방식보다 효과적
- 감세의 경우도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한시적 조치가 우선적으로 행해질 필요
 - 경기침체가 악화되고 재정부담이 매우 커지는 경우 세수비중이 높은 법인세의 세율인하 조치를 잠시 유예하는 것도 한 방안
- 소득세의 경우도 단순 감세는 소비가 아니라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국채발행 규모 증가로 국채시장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존재

3 **재원배분**

가. 이만우(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SOC를 자제하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입
- 기존 지출이 미흡한 분야
 - 교육시설 투자, 복지지출 전달체계 체계화(복지요원 확충 등)
- 단기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분야
- 구조조정 지출

나. 황성현(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출의 우선순위는 교육, 사회안전망, 일자리 창출 분야
- 토목·건설공사 위주 경기 진작책의 한계를 인정
 - 토목·건설 사업 중에도 학교와 도서관, 실험실, 에너지 절약형 건물과 시설, 사회 복지시설, 공공병원, 문화 및 관광 인프라 등에 투자

-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 기능은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 교육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경제정책이고, 복지정책이고, 분배정책이며, 가장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수단
 - 과감할 정도의 교육재정 투자를 통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
- 사회안전망의 확충: 실직자와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 자주국방을 지향하고 군 구조를 기술 집약형 첨단 구조로 선진화하는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
- 재정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간접적 기능을 강화. 공공부문 내에서 일자리를 늘려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의 완충역할 수행
 - 공공부문에서 인력이 더 필요한 분야: 교육, 치안·소방, 사회복지서비스, 식품안전,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연구개발 분야
 - 예를 들어, 전·의경을 축소하고 경찰인력 확충

다.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재정지출 방향과 재정건전성의 연계 필요
 - 이를 위한 전제 미흡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운용·정책 방향 미흡
⇒ 향후 3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방향 제시
비전, 목적의 명확화 필요
- 일자리 창출 사업
 -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 필연 → 고용시장 붕괴 가능성
- 한국형의 사회안전망체계 구축
 - 저출산, 고령화, 녹색성장 등을 연계한 복지체계 구축

□ 경제사회의 생산 효율성 제고 투자

- 상하수도 배관 건설 : 국민건강 및 보건 차원에서 추진 필요
- 학교시설 건설 : 고용효과와 경제사회의 효율성 제고

라. 이영(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저소득층 지원을 우선 목표로 할 필요

□ SOC 신규 사업은 불가

□ 일자리 나누기에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음

□ 복지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문제

⇒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 필요

□ 대학 지원의 대폭적인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고, 대학 지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함

- 구조조정 대상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

마. 전주성(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총수요 증가 효과가 크고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

-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 지원
-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지원

□ 일자리 확충 분야

- 비정규직 문제는 현행 제도의 일시적 유예 등 대량실업을 막을 조치 취하고, 이후 체계적인 법개정 필요
- 정부가 직접 나서 만드는 일자리는 복지사 등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분야에 우선순위 둘 필요
 - 다만 이런 일자리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될 필요
-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것임

- job sharing은 복지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예산으로 일시적 일자리 만드는 것은 신중할 필요
-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너무 상황이 불확실하므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나 가다 어느 정도 경제회복의 바닥이 잡히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임
-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해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신축성도 포함함
 - 최근 초임깎기 운동 등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음

4

질의·답변

□ 질의

- 조영철(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팀장)
 -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이 국공채 발행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공채 발행 문제 및 소화 가능성은?

□ 답변

-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시장에서 모두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결국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
- 전주성(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는 국채 소화가 빠르므로 민간 부문 부동자금이 흡수할 수 있을 것임
 - 각 국가별 신뢰도에 따라 국공채 소화(가산 금리) 정도가 다르므로 신뢰도 확보 및 유지가 중요
 - 상당수 나라들의 경우 결국 정부가 통화증발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게 될 것임
 - 일종의 인플레이션 조세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의 방향과 과제」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서



토 론 전 문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6시10분 개의)

○**진행 송병철** 오늘 간담회는 김호성 예산분석실장님의 사회로, 다섯분의 재정전문가를 모시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릴 자료가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3일 안에 토론회 결과요지와 속기록을 인터넷과 책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와 토론자를 박수로 맞이해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동 박수)

○**사회 김호성** 시간이 다소 지체가 되었습니다. 미리 양해를 드릴 것은 앞서 송병철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당초 간담회 형식으로 자유토론을 하려고 준비됐었던 관계로 텍스트가 없습니다. 발제문이 없고 자유 토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하게 된 것인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할 데가, 기댈 데가 정부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재정에 기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정이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큰 각광을 받는 분야로 떠오르는 상황인데, 정부가 오늘 실무당정협의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23일에 고위당정협의를 있을 예정이고 24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그런 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담회가 내실 있게 이뤄져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냥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으로 계신 유병규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이만우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의 이영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직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지내시고, 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부의 경제학과 전주성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시 직전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내시고 현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의 황성현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산정책처에서 예산분석실장을 맡고 있는 김호성입니다.

(일동 박수)

오늘 간담회 진행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과 진단, 그리고 추경예산의 규모, 재정건전성에 대한 토론을 60분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재원 배분에 대한 것을 40분, 그리고 나머지 20분을 질문답변을 받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쟁점이나 포인트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10일 윤증현 장관이 인사청문회 직후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하던 것을 -2%로 아시다시피 조정했고, 취업자 증감을 10만 명 증가에서 20만 명 감소로, 30만 명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물가는 3% 내외에서 2% 후반 이런 식으로 전망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전망조차도 조금 불투명하다. 이것보다 비관적인 전망이 아직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우선 장기적인 침체로 갈 것이냐, L자형으로 갈 것이냐, U자형으로 다시 리턴을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선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처방도 단계별이든 선제적이든 처방도 달리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이 이어받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병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픈된 장소가 아니고 그냥 모여서 간담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깐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제상황 진단 및 성장 전망에 대해서 다들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내경기가 왜 이렇게 침체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외수 복합불황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언제 해소될지 모를 정도로 미래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측면을 세계경기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결국 경기침체에 따라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고용부문인데 외환위기 당시 침체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가 결국 작년 말부터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습시다마는 민간부문이나 이런 데에서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하다가 윤증현 장관께서 오시면서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물고를 트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올해 공식적인 경제성장률은 -2%가 됐고, 민간경제연구소들도 대개 -2% 내외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세 번째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80년대 석유쇼크가 오고 일부 정치적인 사건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외환위기 때 -6%까지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기별로 보면 아마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성장률이 -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환위기 정도의 심각한 경제침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수침체가 결국 수출경기부진이라는 내외수 복합불황이 우리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출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의한 세계경제의 침체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대개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4~5% 성장하는 것을 견인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우리 수출이 -1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전체 성장률이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일부 해외투자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보다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이것이 언제 회복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세계경기가 언제 회복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경제연구소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5대 복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국가별로 세계경기의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복병들이 요소요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파악됐습니다.

일단 미국경제를 보면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경기부양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금융 산업의 위기가 결국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나가지 않을까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일단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양상이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에 결국 지금 현재 리먼브라더스 투자사의 파산에 의한 금융 불안 양상이 AIG까지 왔는데 이것이 소비자금융, 카드사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시티은행이라든지 이런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확산될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더 심화될, 제2의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이 엔고로 인해서 경기침체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겠고, 제2의 장기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역내교역이 붕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간에 역내교역이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일본의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중국경제도 당초에는 8% 내외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중국경제가 연착륙할 것이 예상됐습시다라는 최근에 세계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6% 내외로 급속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중국경제의 경착륙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엔고불황이 심화되고 중국이 수출부진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경착륙했을 경우에는 동북아의 역내교역 구조가 상당히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구권의 국가부도사태입니다. 물론 최근에 진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세계경기 불안이 지속되고 서방의 지원이, 서구의 동구권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구권에 국가부도 도미노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랬을 경우에도 역시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동건설붐 경기가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들에 의하면 두바이 건설공사가 최근에 들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건설공사대금이 제대로 적기에 지불이 안 되고 있는 사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건설 붐은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외국의 투자자금을 받아서 결국 두바이 도시라든지 중동의 건설 붐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세계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금줄이 막히면서 중동의 건설 붐이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물론 세계경기에 타격을 주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건설회사들, 주력 건설 회사들의 해외건설수주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중에서도 중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건설붐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국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수 복합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지 불투명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전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 성장부진 현상이 심화됐을 경우에는 결국 그 결과가 고용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외환위기 당시에는 약 1여년 사이에 실업자가 100만 명이 늘어나는, 실업자가 120만 명으로 늘어나는 급속한 고용시장의 붕괴양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 말부터 신규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환위기와 같은 급속한 고용시장 붕괴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IMF가 고금리 정책을 쓰게 하고 긴축정책을 쓰게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외환위기 충격을 받고 일시에 도산되는 현상이 나타

나면서 실업자가 일거에 양산됐습시다라는 최근에 들어서는 정부가 저금리정책이라든지 재정지출확대를 통해 가지고 고용을 유지해 주는 상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와 같은 급속한 고용시장의 붕괴양상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시다라는 최악의 경우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고용시장의 급속한 붕괴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당시에 산업별, 직종별, 연령별 고용시장의 붕괴양상을 보면 산업별로 보면 건설, 도소매로 시작해서 자영업이 무너지고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순서로 고용시장이 붕괴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또 직종별로 보면 당연히겠습시다라는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청년실업자에서 사오십 대 실업군으로 실업자수가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났습시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최악의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 1년 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특히 상반기 중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부 다 악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플러스 실적이 발표됐습시다라는 1/4분기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도 상당히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일시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결국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이런 내외수 복합불황과 세계경제의 불확

실성 속에서 급속히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고용시장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드립니다.

○**사회 김호성** 이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하실 분……

그러면 이번 추경이 그동안 지상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습시다마는 11조~12조의 세입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세출은 18조~19조 이렇게 해서 29조~30조의 추경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인가 국세청에서 전망한 것으로 보면 12조 원의 세수결함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3월말이면 기업실적 악화를 걱정하셨는데 법인세수가 초비상이 되고 채납관리, 고소득전문직 이렇게 해 갖고 세수확보가 국세청의 업무관건이고, 올해 거의 전쟁 상황이 아니겠는가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0조 원 정도 되는 추경안이 나올 경우 정부는 일자리가 60만 개, 그리고 성장률은 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예산정책처에서 그동안 죽 위치한 것으로 보면 2%p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한 1%p 정도. 그리고 취업자 수 증가eh 그보다 못 미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비추어 그러면 추경을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우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전주성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미 올해 예산이 작년 말에 수정예산을 거쳐 가지고 대폭 적자예산으로 짜여졌고, 또 감세안도 마련됐습

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만들어진지 집행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또 추경예산을 논의해야 할 만큼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할 것 없이 최근에 경기예측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수정을 하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진국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제기되고 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게 한 4% 마이너스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추경규모를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DP의 3~5%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너무 경제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기업하는 분들 만나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97년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그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추경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세수결함이 12~13조, 또 경제가 악화될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15조 근방으로. 그렇게 본다면 29조, 30조 하면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액수는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규모를 상반기에도 한 번 하고, 더 악화되면 하반기에도 한 번 하더라도 GDP 5% 정도까지도 과감하게 추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선제적이고 확실하고 충분하게 대응했으면, 오히려 작년의 수정예산도 작년에 더 크게 규모를 만들었으면 올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었는데 작년도 조

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이 우려됩니다마는 지금은 건전성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폭적인 추경예산을 주장하고 싶고, 동시에 재정개혁방안도 마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건전재정을 복원하겠다는 두 가지 안을 같이 이번에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재정개혁도 할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금통폐합, 공기업선진화 등등해서 엄청나게 재정개혁을 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복원의 의지도 담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대폭적인 GDP 한 5% 정도의 추경을 마련하는 것이……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에 한번 더 해서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토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성 일반적인 얘기하고 추경얘기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11월쯤인가 제가 토론회 같은 데 가서 내년 봄이 되면 세가지 정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거든요, 예측인지 예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공적자금,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공적자금 얘기하니까. 또 하나가 추경예산 보게 될 거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쏫불시위 보게 될 거라고. 쏫불시위는 요새 황사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최근 들어와서 제가 엇그저께 어디 가서 발표했을 적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세 가지만 꼽으라면 뭐냐? 첫 번째가 은행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자본확충 펀드라든가 나중에 사실상 공적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안정기금이고, 추경예산은 우리가 이미

보고 있고, 세 번째가 촛불시위라는 것은 지금 경제위기가 사회불안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측면입니다.

저는 추경은 작년에 11월, 12월에 추경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안 끝나기도 전에.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만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나오면서 예산의 잉크도 안 말랐는데 추경을 하면 실수를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당연한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작년에 싸움들 하면서 예산을 좀더 신중하게 좀더 경제상황을 예측해서 지금처럼 세수가 구멍 나게 안 하고 작년에 좀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잘 짰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추경을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추경은 너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가 빈약한 나라이거든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 세금이 깎아지고 그다음에 동시에 여러 가지 실업수당이나 다른 수당이 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해야 돼요. 손으로, 약간 자의적으로라도. 지금이 그럴 타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정확대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실효성하고 건전성이 되겠지요. 그런데 건전성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걱정해야 되겠지만…… 건전성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이만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예컨대 97년도 98년도 때 제가 신문에 처음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 글을 처음 썼는데 제 타이틀이 ‘재정적자 10% 정도 하라’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거의 우리나라가 균형재정 무드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 거기에 쇼크를 먹었을 정도이고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IMF는 오히려 남미식 처방에 길들여가지고 재정긴축을 하려고 했어요.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1%로 올리려고 했고, 요는 재정을 긴축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구조조정에 쓴다는 식의 얘기인데 다 틀린 얘가지요. 결국 우리 정부가 예산안에서 한 5% 정도 해 주고, 실제로는 4% 적자를 했지만.

단기적으로 원샷으로 적자를 5%해서 경제가 나아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부채가 GDP 비율로 한 33%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5% 더해서 38%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괜찮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재정 stimulus들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적자를 유발하는 것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재정책대를 할 적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timely,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다, 재정은 워낙 시차가 걸리거든요. 작년에 했었어야 할 일을 올해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timely가 있고. 또 하나는 temporary, 가능하면. 그래서 너무 permanent 해지면 지속적인 적자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 T가 뭐냐 하면, 제가 ‘3T’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targeting입

니다. 이 targeting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분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1원을 썼을 적에 이것이 1원이 추경에 들어갔을 적에 이것이 과연 얼마 정도 총수요 확대에 들어갈지 그것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8000억 불 정도 들어갔지요. 8000억 불 들어갔을 적에 그 중에서 얼마 정도가 총수요 효과로 오는지, 잘해 봤자 3000억 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들에 의하면. 굉장히 낮지요.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것에서 대략 실제 세수감수하고 18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대략 우리가 1000조니까 2% 되니까 우리 GDP가 2%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재정 전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종의 아이러니예요.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1달러를 투입했을 때, GDP 1%를 투입했을 적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재정전달체계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보다 총수요 진작효과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감안해서.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이것은 저도 잘…… 여러 가지 해답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적어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마치 자동안정장치가 없으니까 급한 대로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전달체계가 미흡하다면 차제에 독촉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전달체계 같은 경우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제가 보면 참 이해가 안가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거든요, 정부개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규제’ ‘규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규제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꼭 그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예산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가하고, 제가 몇 차례 언론에서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차제에 체계적인 평가기구를 만들어서 차라리 예산이 얼마나 제대로 집행되는지, 집행이 안 되면 왜 그런지 이런 것을 잘 밝혀서 그런 것을 보고서로 차라리 내면 차후에 규제개혁을 할 때도 좋은 증거가 되고 잘 안 되면…… 정부가 나름대로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최근에는 감사원도 동원하고 정부도 동의한다고 하지만 말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targeting에 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targeting에 제가 굉장히 실효성에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전체 액수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전반부에…… 저는 한 번 더 할 것 같거든요. 너무 전반부에 많은 돈을 확 투입해서 그것이 굉장히 실효성 없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

서는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만약 우리 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U자형이나 L자형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장기화된다면 분명히 또다시 재정확대가 지속되어야 하거든요. 이랬을 적에 한 번 사람들이 눈 먼 돈에 길들여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우리가 그동안 전달체계가 시원치 않았으면 그 전달체계를 좀더 개선할, 개혁을 동시에 할 좋은 찬스인데 오히려 돈을 확 몰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부채가 쌓인 다음에 결국은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해서 2차 추경 같은 경우를 고려하면서 1차 추경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액수가 임계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임계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정예산 할 때도 보셨겠지만 갑자기 수정예산 얼마 늘린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차관회의 모여 가지고 막 나뉘 가지고 대충 낙제했던 것 다시 다 올려주고 다 입학시켜 주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액수가 지나치게 커지면 그런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추경 규모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말이 쉽고 행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저는 작년에 어떤 행정부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차라리 쪼개라, 차라리 집중해 가지고 일자리면 일자리, 저소득층 이렇게 주제를 확실

하게 포커스를 들어가면 그래도 집행이 쉬울 텐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백화점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소예산처럼 들어가게 되면 이것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점입니다.

○**사회 김호성** 한 가지만 말씀 중에, 아마 이 부분은 다 이해하겠는데 세수를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주성** 세수는 세수감이 될 텐데 차라리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까 법인세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화가 되면 세금도 계속 안 걷힐 것 아닙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올해 기업이 장사가 안 되면 내년도 법인세수가 많이 안 걷히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수 비중이 굉장히 큼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자동안정장치는 그냥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 김호성**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성현 교수님.

○**황성현** 지금 전반부에서 추경규모와 재정건전성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지요.

토론회 포맷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르고, 어색한 것 같고, 아까 제가 늦은 것은 처음부터 수업이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결국 추경규모나 재정건전성의 전반적인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후반부에 재원배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도 오늘 YTN 뉴스 자막으로만 봤습시다만, 그러니까 당정협의하면서 29.5조 원 얘기가 나

오고 15조 원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만 본 상태인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이라도 보고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금액만 봐 가지고는 15조 원 국채를 발행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세수결손 부분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여태까지 혼란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는, 저만 혼란스러웠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예산 실무적인 자료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수퍼추경이라고 해서 30조 원 했으면 30조 원만큼 세출이 늘어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논의했던 것 같은데 아마 세수결함분 감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늘어나는 부분은 한 17~18조 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논의의 혼란이 있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정도로 서론을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경제상황을 보면 상반기가 더 나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경을 할 거면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쟁은 많이 하고 검토는 많이 하되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은 아니다,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추경편성 규모를 설정할 때 고려할 것은,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2008년도에 10조 원의 수정예산이 있었다, 이것도 몇 달 지났다고 사람들이 다 잊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어떤 기초에서 10조 원을 점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악화되어야 한다는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최후의 보루고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후세대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결코 아니다…… 누구나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이 정부는 제가 보기에 해외의 다른 대외여건 탓을 너무 하면서 이제는 이런 재정건전성 악화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재정지출 중에서도 개혁을 해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지출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감세는 감세대로 해 가면서 재정건전성을 더 인위적으로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정책들을 하니 그래서 모순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수 있는, 감세하던 것을 멈춘다든지 하면 건전성이 덜 악화되면서 추경을 할 수 있는데 감세는 원래 하던 거니까, 우리의 정책이념과 목적이 감세니까 해 오던 것이니까 하고, 또 경기가 나쁘니까 지출은 지출대로 늘리고, 또 재정개혁을 해 가지고 지출을 줄여야 될 부분에 대한 노력은 게을리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건전성이 심하게 훼손되면 그것은 결국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이고, 이번 정부 시절에 반짝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음 정부, 후세대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채소화가능성 문제도 발행한다고 다 소화가 될 것은 아니니까

소화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우려해야 될 것이 대규모로 어떤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사업 선정해서 위로 올리고 그것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낭비적인 사업이나 사업의 부실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추경안이 나오고 그 사업내역을 봐야지 이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 제가 올해 2월에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 관리대상수지를 역산해 가지고 GDP의 1~2% 수준에서, 즉 10~20조 원 수준 정도를 얘기했었습니다. 그 논문 쓴 것은 1월이고 1월에는 이런 추경편성 논의도 안 되던 때이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관리대상수지가 너무 나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무슨 이론이 있을 수가 없고, 뭐 4%는 되고 5%는 안되고 이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관리대상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데 1997년 경제위기 직후에 98년도, 99년도 그 당시에는 관리대상수지 개념이 없었지만 그것으로 환산해 보면 그 당시 적자가 GDP의 한 4%에서 5%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우리가 감내할만한 수준으로 보고 4~5% 수준인데, 지금 현재 수정예산 후에 적자가 2.4%이고 거기에 세수가 10조 원까지 나빠질지는 몰랐지만 나빠지는 것을 고려하면, GDP 대비 1~2% 정도의 추가 재정지출을 하면, 10~20조 원 정도를 하면 재정적자 비율이 한 5% 범위 내외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하면

적절하겠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치적인 논의를 보니까 뭐 30조 얘기가 나오고 50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속으로…… 아시다시피 저는 케인지안에 가깝고, 예산기능의 정상화, 지출확대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작은 정부, 감세를 얘기하는 정부가 저같은 사람이 경제상황이 나쁘니까 10~20조 이 정도…… 좀 크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어리둥절했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세수결함 포함해 가지고 실제 늘어난 부분이 18조, 19조라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거나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수퍼추경’이라는 신조어를 냈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말에 ‘수퍼’를 붙이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못 짰으면 거기에다 이렇게 붙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재정건전성 문제라든지 국채소화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또 아까 전주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하반기에 경기가 계속 비슷하게 나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써버리면 사실 이번에 추경 편성 후에 적자수준이 관리대상수지 기준 5% 수준이 되면 거의 임계치 한도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하반기에 나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이번에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큰 방향에서 볼 때 저는 정부가 크게 봐서 국정운영, 특히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그 비전부터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7·4·7 얘기를 했었고, 감세와 작은 정부를 얘기했는데, 감세는 지금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경기상황 얘기하고 추경 얘기를 하면서 지출확대가 일시적인 것인지 잠깐만 하고 말 것인지 명확치 않고요. 그런데 재정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커지면 계속 전년 대비 증가로 커질 것이고, 하던 사업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 없을 테니까 지속될 것인데, 대체 해외여건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비전과 정부의 재정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불확실하고 그저 임기응변적으로 지금은 경기가 나쁘니까 쓰겠다,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세정책이라는 것도, 조세부담률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인데, 2012년까지 20%대까지 낮추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저는 노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을 여기에서 다 얘기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조세부담수준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데 자꾸 낮추겠다는, 거의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념적인 얘기를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난 얘기지만 작년에 4.6조만큼 추경한 것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경제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추경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했으면 지금 도움이 됐을 것이고, 작년에 9조 정도 감세했는데 그것을 안 했으면 지금 세계잉여금이 남아가지고 국채를 덜 발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소비나 투자 촉진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불확실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런 상황 다 봐가면서도 국회에서는 작년 연말에 감세정책들을 했었는데 상황이 이제 더 나빠졌으니까 소득세나 법인세 감세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제출해서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관련 세제를 완화시키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세금가지고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비판하시던 분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세금 가지고 부동산 가격 조금이라도 부추기려는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고, 지금 무슨 부동산 관련 세제, 종부세 얘기, 지나갔지만 그런 얘기할 시점도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신뢰성 문제인데, 이것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의 신뢰문제를 야기했었고, 7·4·7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작년 10월초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경제

전망을 보면 그때도 2012년에 7% 얘기가 나오고,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도 9월말 10월초에 발표한 경제전망에 보면 2009년도 경제성장 전망이 4.8에서 5.2%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표를 해 가지고 신뢰를 잃어왔는데,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우리 재정규모, 국가채무문제 이런 논쟁들을 했습니까? 저는 분명히 과거에 과도한 비판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의 신뢰가 상실되고 정부 통계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요즘 가끔 정부 고위당국자들이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실 때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기 때문에 건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님은 일관성을 지키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국가채무 문제를 얘기하셔서, 지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은 다르시지만 반대하시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지난 정부 시절에는 정부의 국가채무 통계에 빠지는 것이 많고 뭐 해서 우리 채무 수준이 OECD보다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시다가 지금은 우리 수준이 건전하다고 얘기하고 계신지…… 그렇게 얘기할 것이면 과거의 비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 통계의 문제가, 만일 문제가 좀 있으면 고칠 것은 고치고요. 그래서 그 신뢰부터 제고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정책에 대

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김호성 이어서 이영 교수님.

○이영 제일 제가 당황하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로 조그만 방에서 얘기하는 줄 알고 강의하다 강의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일 주니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황성현 교수님이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약간은 매번 작년에 추경하고 수정예산안 나오고 이럴 때는 계속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재정건전성 얘기하던 재정학자들은 다 어디 가고 왜 재정학자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보기에 시니어 교수님들도 그렇고 젊은 우리 재정학자들도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나온 추경규모는 저희가 생각할 때 재정건전성 드디어 걱정하기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황성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수정예산안 나오고 지금 재정적자만, 그리고 항상 정부 통계는 최근에는 관리대상수지로 다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 얘기하는 것은 전부 관리대상수지니까. 그것들로 계산하면 그때가 2002, 2003 정도 됐고요. 지금 나온 것대로 황성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30조 원 정도 되는 것을 해서 계산하면 이미 GDP 대비 5%가 넘어가는 재정수지 적자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올해 GDP가 1000조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이고, 1000조보다 적다면 실제로 숫자가 더 커서 5%,

6%까지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너무 많이, 우리가 준거로 할 수 있는 숫자가 과학적인 숫자가 없어서 얼마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4%, 5% 이런 정도 그냥 숫자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넘어가고, 우리가 외환위기 때 5.1%로 기억합니다, 재정수지 적자가. 물론 외환위기 때문에 예보나 KAMCO를 통해서 감춰진 적자가 대량으로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정책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도 구조조정 펀드에 들어가면서 그쪽에 감춰진 숫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국채가 떠안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총합해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느낌은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 쓸 기회가 있으면 이제는 재정건전성도 조금은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민주당 얘기하는 숫자를 항상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지출 자체는 15조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숫자는 아니고요.

그런 정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가 유 박사님 전체적으로 잘 보신 것처럼 대외경기 여건이 굉장히 나빠져서 전체적으로 나쁠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약간의 희망의 조짐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역수지 쪽이 상당 규모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월 달.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경상수지 쪽도 상당 폭 흑자가 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아주

크게 보면 물론 대내부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대외적인 것에 비하면 원인은 대외 쪽에 훨씬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외경제충격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굉장히 확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약간은 대내적인 충격일 때 재정을 굉장히 크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대외충격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다 맞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대외 쪽에서 지금은 약간 무역수지 흑자 나고 이러면서 이쪽에서 일부 흡수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재정지출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얘기가 항목별로 될 것이고.

재정 조기 집행하는 것도 실제로 상당규모 하고 있는 것을 약속은 60%하고 일부는 70%하겠다고 했고 그것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서 효과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황성현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것은 작년에 감세하고 작년에 추정했던 부분의 효과가 나타나면 지금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대외부문에서 충격이 무지 컸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내수가 아주 몰락한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렇게 됐는데, 감세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얘기했던 2012년까지 20% 조세부담률 가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제 머릿속에 가진 숫자는 23% 정도, 어차피 우리가 재정지출 쪽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경제사회적으로 발전도 하고 고령화도 진행되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약간은 늘어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줄이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 방향이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은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세하는 부분은 맞고, 부동산 세제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합리화하는 방향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감세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인식이 강하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저는 감세안 중에 일부는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것은 조세 가지고 형평성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레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조세 가지고 형평성 개선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유럽국가에서 잘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잘 되는,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옵니다. 룩셈부르크 인컴스터디 같은 것을 가지고 해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건이 안 되어서 조세 가지고 형평성을 도모를 못하는 것이지 여건이 제대로 되고 우리가 세원을 좀더 양성화하고 좀더 구멍 뚫린 부분을 잘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세제는 실제로 비용을 따져서 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 이런 쪽은 아니고 개인소득세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율 낮추는 것도 저는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세원 양성을 좀더 하는 것이…… 실제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감세하고 이런 방향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합리화 방향이고 조세정의 자체는 개인소득세 부분에서 좀더 누진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현**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한 말씀만 코멘트를 드리겠는데 여기서 부동산 세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이영 교수께서 조세부담률 23% 얘기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치라면 저하고 별로 의견차이가 없고, 그런데 그 조세부담률 1%p, 0.5%p 이 차이가 중장기 시뮬레이션 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20.8% 가겠다는 정부의 발표하고, 한 23%대로 가겠다는 것하고는 재정규모라든지 재정건전성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20.8%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말 제가 보기에 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한 23% 수준이 가능하겠다고 하면 제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저는 그것을 별로 작은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호성**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논의를 위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저도 내역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도 보도나 해서 저한테 오는 정보를

갖고 보면 추경 30조 원은 세계잉여금이 교부금 정산이나 공적자금 상환 등등해서 남는 돈이 2조 1000억 되고, 한은 잉여금 중에 정부에 납입할 것이 1조 50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기금 여유재원을 국채를 덜 쓰려고 여유재원을 5조에서 10조, 이러다 보니까 국채발행 규모가 15조~16조가 그렇게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유재산도 연말까지 일부는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규모가 크지 않을 듯하고, 그런데 재정건전성 부분이 추경을 한편으로는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황성현 교수님께서서는 10조, 20조 얘기하셔서 다른 말씀인 줄 알았더니 나가는 부분만 치면 사실 비슷한, 세수감을 합치면 다 비슷한 말씀이 되겠고, 그렇다면 건전성을 신경 써야 되겠느냐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테고, 또 한 가지는 아울러서 국채발행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것이 시중에 일단 소화가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자율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이 등등 걱정되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두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된 재원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생긴 국가채무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로로 가져간다든지 향후에 국채는 물론 상환계획이 다 있습니다마는 국채상환계획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길 하나,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서 세대간에…… 또는 말이 세대간이지 사실은 정부간 배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이 적자부분을 몽땅

메우려고 하려고 하지도 않을 테고 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로, 과거에 공적자금도 DJ정부 말기 2002년도에 해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서 가는데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재정을 투입하고 한편으로는 건전성을, 건전성이라는 것에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또는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는 이 부분에 대한 발생된 우발적 채무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우 교수님 얘기해 주시지요.

○**이만우** 물론 지난 정부 때 정부부채가 갑절 정도 늘어났습니다. 150조 되던 정부부채가 300조 가까이로 늘어났는데 저는 과거에 외환위기 때도 봤지만 우리 재정건전성이 그래도 유지됐기 때문에 공적자금도 160조인가 투입해서 빨리 극복하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금융위원장께서 정부 또 공적자금을 한 40조 투입하겠다, 이것도 중국에 가면 지난번처럼 정부부채로 전환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적자재정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고, 요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남북경협에 따른 정치비용도 고려하고, 저출산문제 이런 것을 고려하면 적자재정문제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정부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기금을 매 3년마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통폐합도 하고 어떻게 기금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데 내년이 그 해인데 올해 당겨가지고 기금개혁도 하고 기타 정부가 개혁할 게 참 많습니다. 공기업경영 효율성하고 민영화, 아까

국고…… 세금외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하도 증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단계별로 어떻게 민영화계획, 선진화계획을 자꾸 추진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중장기적인 플랜도, 꼭 추경만 짤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재정지출을 개혁할 수 있는, 또 평가체제도 개혁하는 이런 것도 같이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재정개혁과제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재정개혁과제는 중장기적인 과제이고, 추경은 단기적인 과제이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부분적으로 같이 고려해야 되고, 저는 추경이 올해만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년도 경제상황이 그렇게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적자재정이 앞으로 2~3년은 최소한 계속 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경제가 그렇게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또 세계경제도 다들 평가기관에서 굉장히 침체가 오래 지속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수출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GDP의 한 45% 정도 수출의존을 하니까 굉장히 국내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면 올해의 추경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을…… 국회예산처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건전성을 복원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하시고 토론도 대대적으로 하시고. 또 재정개혁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도 같이 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건전재정을 복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제가 굉장히…… 기업인들 만나 보니까 어렵다고, 저희들은 학교에 있으니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에서도 분야별로 기업인들을 만나보십시오.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안 좋은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에 만나 보니까 매출액이 엄청 줄고, 그다음에 제대로 풀가동을 못하는 아주 생각보다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고 광범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정하면 수치에 너무 급급하고 건전재정에 너무 급급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하반기에도 필요하면 저는 추경 한번 더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예산처에서 재정개혁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성 앞에 하신 분들을 받아가지고 clarifying하는 코멘트를 몇 개 하겠습니다.

조세부담률 논쟁은 여기 메인논쟁하고는 다르지만 나왔는데 제가 작년인가 제작년에 이 정부 들어올 무렵에 조세부담률을 세팅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은 토론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조세부담률 같은 경우는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경기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부세의 감세 타이밍을 보면 실제 감세한 해에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확해요, 장기적으로는 맞지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5년 정도 임기를 가진 정부가 몇 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이 항상 정부가 어떤 목표를 세울 적에, 특히 숫자를 얘기할 적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7·4·7 그런 것들도 선거 때는 좋았지만 정부가 출범해서 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세부담률도 수치를 주는 것이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영 교수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외충격이니까 수출이 예를 들어서 유 본부장님도 얘기하시겠지만 무역수지 흑자가 되면…… 이것은 좋은 사인이지요, 달러가 들어온다니까. 또 달러가 들어온다는 사인도 되지만 동시에 총수요 압박을 덜어주는 거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수출도 떨어지지만 수입도 떨어져서 오는 나쁜 성격의 수지 흑자이고, 그래도 흑자가 낫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효과를 봤잖아요. 환율 임팩트를. 그런데 그것이 하반기로 가면 상쇄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 통화를 따라하면서. 또 어느 정도는 그것이 오르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좀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사업을 하다가 집안에 사단이 났다고 해 가지고 부인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남자가 나가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재정지출 확대를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외환위기 때하고는 달리 수출로서 총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무역수지효과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Net Export가 플

러스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99년도 이후처럼 수출이 확 붐을 일어서 리커버하기는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총수요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지출확대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전성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temporary로 한시적으로 끝나야 돼요. 같은 차원이며 저도 세금 같은 경우는 법인세는 어느 정도 유예를 하자는 얘기를 했고, ITC(income tax credit) 같은 경우는 비율을 높이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매기자는 식의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temporary한 정책이기 때문에 좋지 않나 하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재원배분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 이만우 교수님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회계 국채도 꽤 늘었고 그다음에 외평채 규모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외평채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지난 몇 달 동안 들여다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환율 떠받쳐 보려고 많이 한 거거든요, 수출 잘 되게 하려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외평채로 인한 국채 같은 경우는 금융성 국채이기 때문에 달러라는 자산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 국채하고는 구분을 많이 합니다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3, 2004년 같은 경우는 몇 조씩 기금에서 날려버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다 무리하

게 IMF에 가서 개입한 것들이거든요. 무리하게, 아무 효과도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몇 조 같은 경우는 숨어있지만 잘 나타나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출세는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숨어있기는 하지만 좀더 신중해야 되고, 지난 정부에서 죽 오면서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를 거의 발행을 안 했었던 거예요. 외환위기 이전에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98년도 99년도에 한 10조가량 됩니다. 그러다가 죽 줄다가 2005년부터 9조, 8조, 7조, 7조…… 거의 10조 수준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경기가 어려우면 적자를 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오히려 흑자가 되어야 하는데 한번 발을 뺀 것은 잘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통계를 보면 굉장히 steady하게 일반에게 적자로 뺀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줘 가지고 어떠한 절대적인 추경규모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적자의 성격, 내용, 얼마나 지속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코멘트하고 싶은 것은 숨어 있는 재정부담이 공적자금 관련 부분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98년 그 무렵에는 우리가 KAMCO 하고 예보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보증채를 발행했지요. 정부에서 나중에 보증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49조 정도를 나중에 국채로 전환해 줬는데 당시 굉장히 논란이 심했어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면, 그걸 투명하게 처음부터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첫 번째가 투명성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국채시장이 너무 작는데 차제에 국채시장을 활성화해 보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보증채로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도 임계치를 넘어가면 굉장히 모럴 해저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냥 막 써도 되는 돈처럼, 부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채로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뒤섞여 가지고 책임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이번 국채로 따로 칸막이로 한다는 것은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공적자금 들어가는 것을 보증채로 해놓고 거기에서 가급적 책임지게 하면 적어도 칸막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평소에 추경 같은 경우 디펜스가 잘 안 되면 차라리 나눠서 하라고, 이것은 오로지 대학교수만을 위해서 쓰게 한다거나…… 청년실업이나 꼭 필요한 부분을 정해 놓으면 사회적인 포커스가 가거든요. 우리나라 기금이나 칸막이 재정을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판 받아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순기능 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나라 재정체계에서는 차라리 투명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제대로 쓰게 하는 것들이 추경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 보수적으로 나눠서 하반기도 생각해 보고 내년도도 생각해 보고 이런 식으로 보자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론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한다는 자체가 갑자기 경제에 demand shock가 들어와 있으니까 demand가 부족하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이런

쇼크를 미래에 spread out시킨다는 것이 보통 정부 적자재정의 main benefit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비슷한 효과를 누리면서 한 번 더 완충장치를 해 가지고 보증채로 출발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을 제가 공적자금 부분도 많이 보니까 생각보다 순기능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최근 국채발행 한도가 100조가 넘어가는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채시장을 활성화하는 자체, 국채의 추이를 다양하게 하고 발행방식도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때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5.1%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4%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5% 정도. 제 생각에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남미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집합적인 사고가. 당시에는 98년도에는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5.1%, 그다음에 3.9, -1.0, 그다음에 흑자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꼭 그렇게 지속적인 문제성 있는 적자가 아니면 5~6% 정도 stimulus가 가는 것 자체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회 김호성 시간이 생각보다 앞부분 토론하다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 끝부분으로 용처, 어디에다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나온 얘기를 죽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하고 고용유지, 취업, 중소기업 수출자영업자, 지역경제 활성화, 일부는 미래 대비

투자로 녹색성장부분, 4대강 부분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데 조 애기하다가 현재 4000억으로 준 것 같기는 한데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추경에 대한 시각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사안이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기금이 40조인데 과연 이것이 이번에 또 올 것이냐? 금융안정기금은 조금 더 있어야 추후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것은 추후에 문제로 생각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이만우 교수님 얘기해 주시지요.

○**이만우** 정부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실효성이 있을 텐데 정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 드린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수정예산에서는 주로 SOC를 중심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SOC 투자는 그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큼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발등에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SOC 분야 추경에서는 그것을 자제하고 나머지 단기효과가 큰 분야에 많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이제까지 소홀히 하던 분야들 예를 들 것 같으면 교육시설에 이제까지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 가지고 교육투자를 인프라를 까는데 소홀히 했던 분야들도 찾아서 이번 기회에 보전하고, 아니면 복지지출 전달체계의 문제, 요즘 복지 분야 지출이 연금뿐만 아니라 기타 기초생활 등등 많습니다. 이런 요인을 확충해서 전달체계를 제대로 추경에서 하면 고용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찾아서 체계화시킨다든지 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미흡했던 분야

를 포함하면서 단기적인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구조조정에 쏘으면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잘해야만 나중에 위기가 끝나고 났을 때 빛을 발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제가 다른 예는 잘 모릅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계획을 엄청 많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외국신문이나 국내신문에서 소개되는데 우리 한국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좀 더 활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한 가지 예만 하나 든다면 외환위기 직후에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맡았는데 그때 1만 8000명 정도를 구조조정 했습니다. 한 20만 고용인 중에 근 10%가량, 아마 외환위기라는 특단의 상황이 아니라면 평상시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전부분에서 한 3500명을 해고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만성적인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3500명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그 이듬해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3500명 인건비가 바로 흑자더구만요. 그렇게 줄었는데 생산량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위기 이후에 많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유희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희인력이 있으니까 LCD분야 투자를 많이 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서 삼성이 그런 가전부분에 특히 LCD TV 분야에서는 소니를 따라잡는데 일등공신 역할이 바로 그 구조조정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위기 때에 구조조정을 잘해야만 다음 위기 끝나고 나서 바로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텐데 지금 구조조정이 실제로 공공부문이고 민간부문이고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사정은 악화될지 몰라도 군살을 빼는데 정부 예산지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김호성** 납세자한테는 감세라는 조세지출이 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부분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황 박사님.

○**황성현** 어차피 마지막 발언기회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원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것 한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경자금 이 한은잉여금하고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국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다 아시겠습니까마는 한은잉여금의 경우에는 통안채 이런 거 해서 환율이 오르니까 과거에는 적자가 나다가 이제는 잉여금이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세외수입 같은 것으로 해서 적자재원으로 안 잡힐 것 같고, 세계잉여금은 작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적자재원이 되는 것이고,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당장 국채는 발행 안 하지만 여유자금이라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채무 자체는 덜 늘어나지만 자산이 같이 줄어드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치 이번 정부가 전대미문의 세계경제 위기를 많이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발표했던 논문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런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 정부가 운용했던 2008년과 2009년의 재정적자만 계

산해도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재정적자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관리대상수지 결산치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추정해보면 1.7% 정도 적자로 보고 있고, 올해 예산을 작년에 짤 때 경제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 것이 1% 적자입니다. 그것만 해도 평균이 1.35% 되는데…… 제가 무슨 참여정부의 대변인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비판할 때 우리 재정학계에서도 일부 그랬고 통계도 제대로 안 보고 참여정부가 적자정권, 국가채무 늘리고 좌파정권이고 뭐 퍼주기 했다고 하는데 참여정부 5년동안 관리대상수지 적자비율을 평균 내 보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국회예산정책처니까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0.46%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그렇게 비판하고 집권한 한나라당이 재정건전성 문제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감세는 하면서 재정지출 줄이는 노력을 안 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외 탓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화가 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재정개혁에 대해서는 여기서 반대하는 분이 없고 당연히 재정개혁을 해서 지출낭비를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재정개혁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나와 봤는지, 어느 정권이나 들어서면 그래도 기금특별회계를 통합하고 뭐하는 노력들을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디지털시스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무슨 그런 화두를 꺼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개혁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제 논

문에도 나옵시다라는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를 위해 행정부 체계 내에서도 그런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처를 만들자는 안을 제안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재정 관련된 논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자꾸 얘기합니다. 추경도 중앙정부가 있고 수백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하게 되면 그것이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전부 중앙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재정낭비가 더 심한 쪽이 지방쪽입니다,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이것을 어떻게 일관되게 관리를 잘 할까? 다 국민세금인데. 이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재정개혁도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을 포괄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세정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무슨 조세부담률을 낮추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제가 보기에 이번 정부는 그것을 하나의 신앙……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아니라. 이념과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감세라고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에서 발 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세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거시경제교과서 제일 앞에 나온 것처럼 세금 올리고 지출을 늘려도 그것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재정지출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제가 시간을 썼으니까 되도록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이 사회안전망, 그다음이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하도 비판을 많이 해서 이제 진부한 표현이 됐지만 주로 토목건설사업, 땅 파는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지만 이 정부가 잘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육, 사람과 지식에 대한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토목건설사업을 하더라도 경제성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인운하사업 같은 것, 그것 경제성 없는 사업입니다. 그냥 수공사업으로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세금부담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수정예산하면서 SOC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미리 90%는 지방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것 경제적 효율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예비타당성조사 요건을 완화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면제하겠다, 이것은 재정개혁의 정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목건설사업도 강 정비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학교 짓고, 실험실 짓고 에너지 절약형 건물 짓고, 공공병원을 짓고, 이런 데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지금 추경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위기가 오고 내수가 나쁘니까 재정에서 돈 좀 풀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자.’ 재정의 본질적인 기능은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고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기상황이 나쁘면 당겨서 지출하고 지출도 늘리고 빚내서라도 하는 것이고…… 목적과 본질이 바뀌어서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것이 재정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은 경제상황이 나쁘니까 지출을 좀더 빨리 당겨서 그 규모를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교육문제 해결인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자고 하면 굉장히 고리타본 문제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무슨 극복대책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사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럴 때 교육개혁의 큰 플랜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제대로 강화하고…… 이런 노력 해야합니다. 돈 투자 제대로 많이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교육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돈을 써서, 포스텍 같은 것이 돈 없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돈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써서라도, 더구나 요즘은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써서라도 좋은 대학을 만들고 좋은 학교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있습니다. 그냥 4대강 정비하고, SOC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교육 얘기 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은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계층과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자는 말씀이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순수한 공공재로서 ‘국방’ 얘기인데 보수정권에서 국방을 어떻게 튼튼히 하고 기술집약형 구조로 해서 국방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논해야 하는데, 오히려 진보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참여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법을 만들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얘기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라 하더라도 우리 군 구조를 선진형으로 만드는 국방개혁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돈도 덜 드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제가 생각을 좀 바꾼 분야입니다. 저도 과거에,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다 그렇습니다만, 인건비 지출은 낭비고, 경상경비 비중이 높아지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은 줄일수록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교육도 교수가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조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치안 문제, 경기 서남부에 경찰서를 만들려면 경찰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는 분야가 있으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고, 농림부에 사람이 남는다고 해서 농림부 인력 줄여서 경찰로 못 만들면 증원이 필요합니다. 치안, 소방,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식품안전, 이것을 무슨 쇠파라치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점검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또 소비자보호라든지 이렇게 정부가 지금까지 못했던 분야, 이런 분야에 일자리

를 늘리면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늘리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런지, 옛날에 돈 없을 때 국방의무를 이용해서 전·의경제도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재정 능력이 되니까 전·의경을 줄이고 그것을 정식 경찰인력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가는 방법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비판적으로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지금 정부가 조세·재정운용에 있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7·4·7 얘기하다가 감세, 작은 정부 얘기했는데 지금은 지출을 완전히 크게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재정개혁 얘기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향부터 새롭게 잡고 7·4·7, 감세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들은 완전히 포기했다는 선언을 하고, 조세재정운용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재정개혁 확실하게 하고, 감세 같은 것 포기하고, 제발 땅 파는 것 그만하고 사람에 투자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호성** 다음은 유병규 본부장님.

○**유병규** 하여튼 올해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 같다는 전제 하에서 추경예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고,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을 재정의 구조개혁 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지만 재정운용 측면에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재정운용이 되면 재정건전성도 간접적으로 제고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30조 원의 추경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결국 재정건전성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가 일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외환위기 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됐다가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서 건전성이 다시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경예산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재정운용을 재정의 효율성을 증가하는 측면에서 써야 하겠는데 그 기본 전제가 아까 황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운용목표를 수립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경제운용방향이 명확히 제시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추경예산을 짜는 이 시점에 앞으로 대내외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3년 동안 경제운용방향이냐 목적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수립하고 그 전제하에서 추경예산은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의 경제침체 상황이나 장기전망을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첫째는 경기침체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

정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될 것입니다, 1/4분기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잡세어령을 하라고 많이 얘기해서 기업들이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수지가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기업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시장의 붕괴현상이 급격히 2/4분기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아울러 급격한 경기침체를 보전하는 데 결국은 우선적으로 용처를 마련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체제는 솔직히 기업뿐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안전망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둔다고 하면 기업만이 결국 사회보장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한국적인 한국형 사회보장안전망을 추경예산을 토대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출산 고령화현상이라든지 또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체제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그런 쪽에 자금이 많이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제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 다시 말해서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하고는 싶었지만 해야 되는 일이지만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상하수도배관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체적인 상하수도 배관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보건이라든지 건강문제하고도 상당히 직결되고,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고용효과도 있을 뿐더러 중장기적으로도 사회 인프라 내지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경제사회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까 또 황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육부문에 대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 자녀들을 두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차제에 개보수를 한다면 고용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사회 효율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라서 저는 용처를 재정건전성 확보 내지는 우리 경제 생산성 높이는 데, 또 사회복지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김호성** 다음은 이영 교수님.

○**이영** 제가 황 교수님 옆에 오랜만에 앉았는데 계속 반대되는 얘기를 조금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작은 정부 하고 아마 최초 예산안은 증가율이 6.7인가 이렇게 잡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추경하고 수정예산 나오면서 십 몇% 하면서, 일단 방향은 그랬던 것 같고.

단기 장기 나눠보고 경기효과 나눠보면 아마 이 정부 그래도 작은 정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하는 분야에 있어서 저는 정말 이번 것은 정말 저소득층

한데 targeting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주성 교수님 말씀하신 3T가 정확하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OC 신규사업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emporary하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일단 터널 파면 계속해야지 안 그러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면 ‘뉴딜’자 굉장히 많이 붙이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녹색뉴딜 이러다가 지금은 교육뉴딜 이래서 지금 실제로 예산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나와 있는 것에. 그리고 추경에 교육 쪽에는 교사들 인턴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요. 그런 얘기도 들어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무슨 회의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휴먼뉴딜’ 이래서 교육하고 복지하고 다 합쳐 가지고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예산안에 반영이…… 그러니까 제가 주워들은 얘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추경은 일단 크게 병병하게 잡아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논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주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외환위기 때는 금모으기 해 가지고 그것을 비유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잡세어링한다고 해외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우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불황기라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일자리 나누기라는 것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안 되는 기업들이 오히려 인건비 낮추고 생존해서 결국은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 오히려 걱정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학교 쪽에, 제가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한두 개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제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매년 예산이 든다고 하면 복지 쪽 이니까 굉장히 예산을 대규모로 하자 그리고 그쪽 연합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장하고요, 국회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실제로 현장방문해 보면 이것이 정말 정부 지원이 뭔가 그냥 인위적인 것을 창출해내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원래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예산이 일단 배정되고 기관단위로 지원되기 시작하니까 일부러 그것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로만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한다는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방과후 학교 부분이 있고, 방과후 돌봄 부분이 있는데 그 2개가 굉장히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는 것하고 드림스타트도 실제로는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접근해서 조금씩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일부 잘 되는 대학한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굉장히

히 경상비 성격의 것을 상당히 배제하고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 김호성 끝으로 전주성 교수님.

○전주성 재정개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여정부 때는 로드맵이 너무 많아서 헤매느라고 힘들었는데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로드맵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재정분야 같은 경우는 자기 포지션에 관계없이 생각 있는 학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것이 전체 세제 틀에서 integrity를 맞추면서 세제개혁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 상황에서 내렸다 올렸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까 황 교수도 그런 부분을 걱정했지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그것이 시장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체는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종부세를 좋아했던 세제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복지면 복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논쟁을 거쳐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재정 쪽은 공적자금 들어가는 부분은 당장 추경에 반영이 안 되니까 충수요하고 사회불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충수요 측면에서는 볼 것 없습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는데 먼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같은 대학교수라도 저 같은 사람은 소비성향이 1이고 이만우 교수 같은 사람은 0.2 정도…… 그런 식

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이만우** 그런 것을 과대포장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도 아니면서 그런 과대포장을 하십니까? (웃음)

○**전주성** 죄송합니다. 실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냥 한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2년 되어가는 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당분간 유예를 하거나…… 이것은 거의 불을 보듯이 대형사고로 가는 것이 뻔한 것이고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문제예요. 황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 정부 때 사회적 일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던 부분이 많은데 저는 제발 이상한 말 좀 안 만들고 그냥 정확하게 복지 부분 어느 부분에 진짜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일자리 자체가 permanent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자리였으면. 제가 보기에선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실제로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복지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회복지사하고. 많은 경우에 보면 많은 필요한 일들이 temporary하게 끝나 버리고,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더 포커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우리가 얘기하면 그것이 두 가지 파

트가 있거든요. 해고를 자유롭게 미국처럼 하는 파트가 있고 임금이 자유롭게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근 들어와서 임금을 내리고 잡세어링하는 것들도 artificial하지요. 우리나라 같이 아직 복지체제가 완비가 안 되어 있고 일단 실업을 하면 그다음에 다시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순전히 노동시장의 측면뿐만 아니라 복지측면에서 저는 잡세어링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자리가 돈 버는 자리뿐만 아니라 복지구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냉담하거든요. 아까 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자르기 시작하면 자를 것입니다. 다만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에 비정규직 해고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버티기 하는 것이 오히려 한시적인 방법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구조조정 같은 경우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것도 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조금 폭풍이 어디까지 가나보고 나서 적절한 타임을 잡아 가지고 정부가 체계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좀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정책이 우선이 아닌가, 우선순위를 굳이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 김호성** 오늘 간담회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남은 시간인 한 10분 정도 됩니다. 특별히 어차피 이 간담회 내용은 정리를 따로 하게 되어 있고 오늘 간담회 토론해 주신 분들 확인도 다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끝마치게 되겠고, 별도로 제가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 혹시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 질문을 받고 한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산업예산분석팀장으로 있는 조영철입니다.

지금 적자재정을 위한 대규모 국공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금융세계화를 위해서 세계금융시장이 역사상 가장 통합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위기는 지난번 아시아 금융위기와 달리 세계적인 위기거든요.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가 대규모 국공채 발행에 의한 적자재정정책을 쓰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도 대규모 국공채를 발행하고 유럽도 동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동아시아 다 모든 나라가 국공채 발행을 대규모로 하는,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거시경제정책으로서 적자재정정책을 썼을 때 겪어보지 못한 이런 것인데 혹시 이런 새로운, 모든 나라에서 국공채 발행했을 때 공채발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소화되지 않는다는가 금리가 경제위기임에도 높아진다는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규** 일단 당장 저희들 민간입장에서는 국공채 발행이 많이 된다고 하면 기업들이 그나마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른바 구축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국공채 발행이 다 났을 때 결국 제 생각으로는 국가가 전부 다 매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공채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소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가재원을 통해서 다시 매입하는, 그래서 한국은행 역할이 강조되지 않을까. 세계적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소화해 나가지 않

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주성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하면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채물량이 항상 나오면 소화가 빨리빨리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체인지 하는 식으로 침체 위기에서 부동산금이 돈을 쓸 데가 없다고 생각되면 적절한 만기에 국채물량 같은 경우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 생각이구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전 세계가 동시에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고 비슷한 통화금융정책을 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라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라마다 굉장히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저는 그전부터 강조했지만 국채를 소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안전한 나라니까.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국가신뢰도가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국채를 소화하는 물량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산금리도 말할 필요가 없고요. 또 우리가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상당한 부분 신뢰도거든요, 펀더멘탈보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솔직하지도 않고 자꾸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흔들는 거지만. 우리가 재정 쪽은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도 흔들리고 가산금리가 높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팅 포인트는 유리하지만 좀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좋은 지적에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상당한 부분은 적자국채를 통화당국이 살 것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소화를 시킬 수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정부가 어떤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돈을 조성하는 방법이 세금을 거두거나 아니면 일단 먼저 빌리거나 그다음에 돈을 찍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정책이 없으면 남미가 했듯이 돈을 유동성을 발행해서 국채를 소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나라들은 필히 위기가 심화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통화하고 재정이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 없을 것입니다.

○**사회 김호성**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간담회에 와 주신, 형식이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담을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토론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그동안의…… (일동박수)

○**이만우** 제가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한마디 권하고 싶은 것이 제가 지난번에 재정부 기금평가단장을 맡아 가지고 교수님 60~70분하고 기금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내년에 기금개혁안을 만들어내는데 올해 당겨서 해 보자는 제의를 하고 우리 평가단에서 제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 담당국에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처 기금을 잘라야 하는 그런,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내년 정기 때 슬슬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데 저는 오히려 예산처에서 행정부 기금 통폐합이기 때문에 재정개혁 차

원에서 그 안을 만들어주면 기획재정부 짐도 덜어주고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기금이 실은 정치권에…… 국회에서 허락을 안 해 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행정부에도 매일 학회에서 안은 오지만 부산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허락할 것 같습니까? 또 집권당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런 정치적 요인도 가미해 가지고 올해 예산처에서 기금개혁안을 마련해 가지고 행정부하고 합동으로 안을 마련하는 것도 재정개혁의 중요한 좋은 한 가지가 아닌가……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회 김호성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18시00분 산회)